

보 도 자 료

※ 11.24(수) 14:00부터 보도가능

한국금융연구원 · 자본시장연구원 · 보험연구원

제목 : 「금융정책 릴레이 토론회」 개최 (2) - 둘째 날

1. 개요

- 한국금융연구원, 자본시장연구원, 한국개발연구원, 보험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「금융정책 릴레이 토론회」가 11.23~24일 양일간 개최됨.
- 「릴레이 토론회」 첫 번째 날이었던 23일에는, 「2011년도 거시경제전망 및 금융부문 리스크요인」 등 4개 주제에 대한 발표 및 활발한 주제 토론이 있었음.

◆ 제2차 토론회 (11.24일(수) ; 금투협회 3층 볼스홀)		
(14:00~14:05)	인 사 말 씀	김형태 자본연구원장
(14:05~14:15)	축 사	권혁세 금융위부위원장
session 1 (14:15~14:45)	자금세탁방지제도의 진단과 발전과제	윤창현 교수(서울시립대)
session 2 (14:45~15:15)	보험모집채널 선진화 방안	안철경 박사(보험연구원)
session 3 (15:15~15:45)	Private Equity 산업 발전방안	김재철 박사(자본연구원)
session 4 (15:45~16:15)	코스닥 및 프리보드 활성화 방안	이인형 박사(자본연구원)
(16:30~17:50)	종 합 토 론	•사회 : 김필규박사(자본연구원) •토론 : 1)강임호교수(한양대), 2)신인석교수(중앙대) 3)정세창교수(홍익대), 4)엄경식박사(시립대) 5)조인강국장(금융위)

- 23일에 이어 금일에도 「자금세탁방지제도의 진단 및 발전과제」(윤창현 교수) 등 4개 주제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이 개최될 예정임.

2. 금일 발표 주요내용

①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진단과 발전과제 - 윤창현(서울시립대)

< 주요 내용 >

□ 자금세탁방지제도는 범죄의 금융범죄화 추세에서 금융거래의 투명성과 금융시스템을 지키는 금융권의 한 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

- 한국에서 자금세탁방지제도는 빠르게 정착되고 있으나, 제도적으로 자금세탁의심거래보고 기준금액 존재 등 아직 국제기준에는 미흡
- 체제운영상 문제점으로 ①자금세탁방지에 대한 낮은 인식, ②혐의 거래보고의 폭증과 처리미흡, ③심사분석인력 불변으로 상세분석률 급락, ④제공하는 정보의 품질 및 신뢰도 저하(39% 무혐의처리), ⑤금융정보분석원 조직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

□ 한편, 최근 쟁점이 된 차명거래 방지를 위한 기본원칙 정립 필요

① 차명거래 자체에 대한 금지보다는 불법 차명거래를 고의로 중개·협조한 금융회사와 관련 임직원에게 대한 제재조치가 바람직

- 가족관계, 각종 모임 등에서 비롯된 범죄와 무관한 선의의 차명거래가 많음
- 선의차명거래 유형을 사전적으로 구분하거나, 실제금융거래에 있어 차명거래 여부를 판별하기가 기술적으로 어려움
- 차명거래 자체를 금지할 경우 금융거래 혼란, 심리적 불안 초래 등에 따른 금융거래 위축 등 사회·경제적 부작용 우려
- 금융회사 임직원 협조·개입 없이 범죄목적의 불법차명거래가 어려운 측면도 고려
- 외국의 경우에도 범죄와 무관한 일반 차명거래의 당사자를 처벌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

② 국제기준에 맞춰 불법차명거래 확인 등 고객확인제도를 강화할 필요

- * 자금세탁의심의 경우 “거래당사자 여부 확인” → “실소유자 확인절차 준수 의무” 도입
- G20, UN, 세계은행, FATF 등 국제기구도 금융투명성 제고, 부패방지 등을 위해 실소유자 확인을 강화

③ 금융회사의 고객확인제도를 얼마나 적정하게 이행하는지에 대한 감독·검사를 제도도입 취지에 맞게 강화할 필요

- 현재는 고객확인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고 '실제 당사자 여부'를 간단한 문답 등 형식적으로만 확인
- 사회적 인식부족, 제재기준 미비, 검사인력 부족, 고객 이탈 우려 등으로 고객확인제도를 불완전하게 이행

< 정책적 시사점 >

□ 금융정보분석원(KoFIU) 조직 및 한국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의 전면적 개편 필요

- 금융범죄화 추세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자금세탁정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 조직의 전면적·구조적 개편 추진
- 금융범죄의 지능화·전문화에 대응하여 심사분석·IT전문인력 등 자금세탁방지 전문인력을 대폭 양성
-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 이행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하고, 전문가들의 연구와 논의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

□ 차명거래 억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제도개선 추진 필요

- 불법 차명거래 방지를 위하여 현재 시행중인 고객확인제도(CDD^{*})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, 철저한 감독·검사를 통해 동 제도를 적정하게 이행토록 하는 것이 중요

* 고객확인제도(Customer Due Diligence) : 실명법상 신원확인에 추가하여 주소·연락처를 확인하고, 자금세탁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당사자 여부 및 거래목적을 별도로 확인

- 불법 차명거래를 고의로 중개·협조한 금융회사와 관련 임직원에게 대한 제재조치 마련 검토 필요

② 보험모집채널 선진화 방안 - 안철경(보험연구원)

< 주요 내용 >

- ☐ **현행 보험모집채널은 대면전속채널에서 다중채널(Multi-Distribution) 중심으로 변화하고 과정에서 보험모집채널의 개선 필요성이 대두됨**
- ☐ **현행 보험모집채널의 문제점으로 다음 사항들을 지적**
 - 보험상품의 복합화 및 서비스의 컨설팅화가 진전되는 가운데, 보험 판매조직의 금융전문컨설팅 능력 확보에 한계가 있음
 - 일사전속 환경에서 다양한 상품 제공이 제한적이며, 통신 및 인터넷 판매에 대한 영업행위규제 강화는 채널의 성장을 위축시킴
 - 선지급 모집수당 확대에 따른 유통질서 물란,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저해와 불완전판매 증가에 따른 보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됨
 - 보험설계사 평균연령의 고령화 및 조기 퇴직으로 금융산업 전체적인 고용측면에서의 부정적 영향이 초래됨

< 정책적 시사점 >

- ☐ **보험판매자에 대한 전문교육 및 윤리·법규준수 교육 강화 등 교육 제도의 실효성 강화**
- ☐ **판매수당체계 개선, 보험수수료 공시제도 확대, 상품광고심의 강화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 가능성 사전 차단**
- ☐ **보험판매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불완전판매는 원칙적으로 판매자가 그 책임을 부담하는 원칙 수립**

③ Private Equity 산업 발전방안 - 김재철(자본시장연구원)

< 주요 내용 >

- 현재 국내 사모펀드 제도는 자본시장법과 기타 개별 특별법에 의해 다원화되어 있으며, 한국형 PEF로 사모투자전문회사 규정
 - 선진국형 PEF는 아직 미약한 수준으로, PEF의 한 종류인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출자약정액 기준 약 18조원에 그침
- ⇒ 사모펀드에 대한 높은 규제수준, 시장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, 규제체계 다원화 등에 따른 문제점 노출
- 투자자에 대한 다양한 투자수단 제공, 자원배분의 효율성, 자산운용업계의 성장 등을 위해 사모펀드 활성화 필요
- 사모펀드 활성화 및 PE산업 발전 방안으로, 아래 과제를 제시
 - 현존 규제체계내 규제수준을 축소*하고, 자본시장법내 사모펀드 규제체계를 일원화 할 필요
 - * 美·EU 등은 사모펀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나, 이는 지나친 자율에서 필요한 규제로 선회한 것으로 이해할 필요
 - 이와 동시에 선진국의 규제 동향을 감안하여 금융시스템 위험과 관련된 안전장치 마련 필요

< 정책적 시사점 >

- 규제수준이 낮은 외국의 헤지펀드에 비해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진국 수준으로 제도 정비 필요
- 외국사례 및 최근의 글로벌 규제강화 동향 등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사모펀드 제도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마련

④ 코스닥 및 프리보드 활성화 방안 - 이인형(자본시장연구원)

< 주요 내용 >

□ 성장형 중소기업에 대한 장기자본 공급을 위한 시장의 성공요소

- 기업특성에 적합한 별도의 상장·공시 및 거래제도 등 자본시장 인프라를 갖출 필요
- 외부로부터 모험자본(risk capital)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,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

□ 코스닥 시장 현황 및 활성화 방안

- 코스닥은 코스피 2부시장이라는 이미지 고착으로 혁신기업의 장기 자금조달 창구 기능이 축소되고 있으며, 불성실 공시 등으로 투자자 신뢰도 저하
- 소속부 제도 도입을 통해 기업들을 특성별로 구분·관리하고, 신성장 동력산업 등에 대한 상장특례 적용을 통해 자금조달 기능 강화 필요

□ 프리보드 시장 현황과 활성화 방안

- 초기 성장단계 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설립된 프리보드 시장은 인지도 부족과 모험자본의 참여기피로 활성화가 미흡
-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를 위해 기관투자자들이 지정자문인* 역할을 담당하고 기존·신규 지정기업에 대한 투자자 신뢰 확보 노력 필요

* 증권사 등 기관투자자들이 상장기업의 발굴과 상장유지 자문역할을 담당

< 정책적 시사점 >

- 향후 성장형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창구로서 코스닥·프리보드 시장간의 적절한 역할분담 및 상호 보완적인 발전방안 추진 필요

※ 「릴레이 토론회」 관련 문의사항 :

- 한국금융연구원 구본성박사(3705-6364)
- 자본시장연구원 김필규박사(3771-0631)